

해외 입양 인권 침해

국가가 허락한 아동 매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서포터즈 3기



이미지 출처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가 2년여 동안 이들의 기록을 조사했고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 진화위는 **국가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다.**

한국은 세계 최장기간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송출국이다.

한국전쟁 이후 2022년까지 70년 넘게 정부 공식 통계만으로도 17만 명(민간 추산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전쟁 전후 고아와 혼혈아동 긴급구호로 출발한 해외 입양은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이후 경제가 고성장하던 1980년대에 해외로 입양된 아동 수는 최고점에 도달하여 1985년 한 해에 8천 8백 명 이상, 즉 출생 아동 100명 중 1.3명의 아동을 입양 보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일 때도 142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Permanent Address : 533-3, Sangmoon-Dong, Dobong-Ku, Seoul, Korea

Family Chief : **PARK, Jung Ran**

Sex : **Female**

부 Father : **No Record**

모 Mother : **No Record**

기록 없음

Family Origin : **Mil Yang**

Date of Birth : **Jan. 7, 1975**

JAN. 30 1975

Remarks : The above family is established as of _____
in accordance with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chief officer
of the Dobong District Office.

Being an **orphan** child, it was approved by the Seoul District

Court for the surname of the child to be **PARK** and the ori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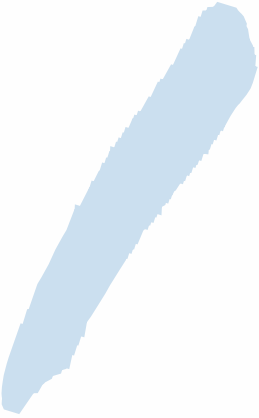
as **고아** on the date of **JAN. 24 1975**

It _____ by the above date of **JAN. 30 1975**

이미지 출처 : 해외입양 보내려 '고아'로 조작...입양인들 "인권침해 진상 밝혀야" TV조선 영상 캡처 (00:49)

이 해외 입양 송출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입양 아동의 출생·가족 기록 위조,
아동 대체, 입양 사후 관리 부재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원가족과 살아갈 권리

입양기관은 *기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삼았으며, 친생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진행하거나 철회 요청을 묵살했다. 일부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허위로 기록하기도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입양은 아동의 원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침해했다.

기아 :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몰래 아이를 내다 버림. 또는 그렇게 버린 아이.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할 권리**

해외 입양 과정에서 친생부모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입양을 결정해야 했다. 국내 양육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상담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일부는 병원비 대신 아이를 내주는 방식으로 입양이 이뤄졌으며, 해외 입양의 긍정적 정보만 제공된 채 동의가 유도됐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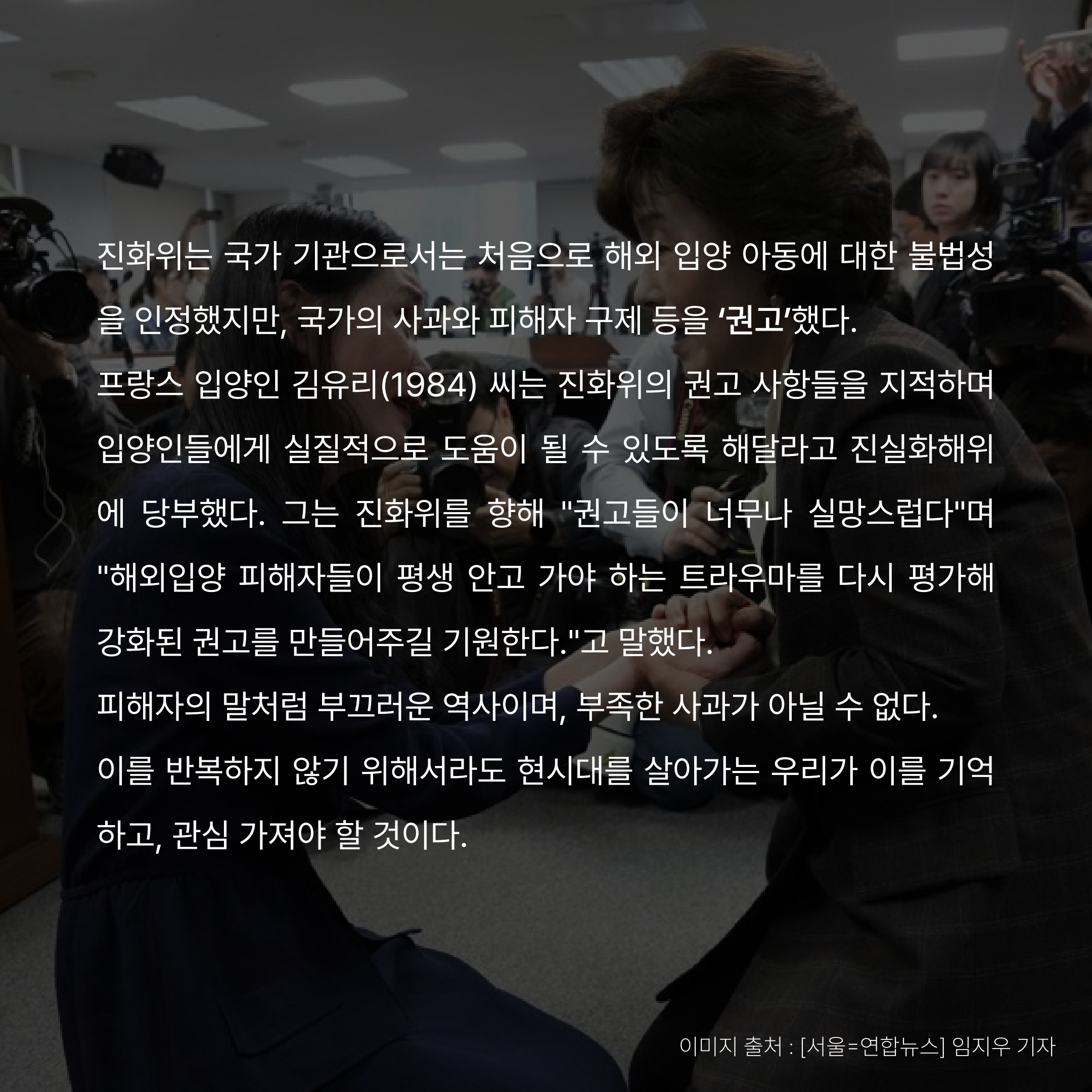
알 권리

해외 입양 과정에서 입양인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 입양 동의서와 가족 기록이 조작·위조되거나, ‘고아 호적’ 작성으로 기존 기록이 은폐되면서 원가족, 입양 사유, 이름과 나이 등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정보 접근이 차단됐다.



이미지 출처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진실규명이 예정됐던 신청자 가운데 절반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다. 덴마크 입양인 한분영(1974) 씨는 "'자료 부족'이 우리를 또다시 피해자로 만들면 안됩니다. 저와, 다른 많은 신청자의 건도 결정되길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입양인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지만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진화위는 국가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구제 등을 '권고'했다.

프랑스 입양인 김유리(1984) 씨는 진화위의 권고 사항들을 지적하며 입양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실화해위에 당부했다. 그는 진화위를 향해 "권고들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해외입양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트라우마를 다시 평가해 강화된 권고를 만들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말처럼 부끄러운 역사이며, 부족한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출처

논문

신필식,이태인,노혜련,한분영,김재민,전세희,and 박현진.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요소 탐색 - 당사자와 실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6.3 (2024): 201-230.

기사

"고아로 조작하고 숨지면 바꿔치기"...드러난 해외입양 인권침해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4752&ref=A>

"고아 아니고 미아인데 입양 당했다"...진실화해위 "국가는 사과하라" [이런뉴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3407&ref=A>

영상

해외입양 보내려 '고아'로 조작...입양인들 "인권침해 진상 밝혀야" / TV조선

https://www.youtube.com/watch?v=_eKMEvE8Qk8

[이슈픽] 입양인가 납치인가..화해위, 과거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인정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bxvrY8VO3Hk&t=28s>

이미지

이미지 하단 참조